

◆ 政府 施策 ◆

外國人근로자 2만명 추가도입

— 業體當 종업원數 20%까지 배정 —

올해 중 외국인근로자의 추가 도입이 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들 외국인력들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배정된다.

통상산업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중 당초 1만 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처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가 추가도입 외국인 근로자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 것은 군 복무대신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올해 실질적으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지난해의 경우 2만3천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현역 1만2천명과 보충역 중 고의근무요원으로 빠지고 남은 3천명등 1만5천명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산부는 또 최근 중소기업 중에서 인력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정도가 소형기업일수록 더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외국 인력을 중소기업구조개선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종업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우선 배정돼 왔다.

이와 함께 통산부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수 만큼의 인력만 업체에 배정했으나 이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방안을 재정경제원, 외무부, 법무부,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5만명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을 받아들여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약 4만5천명이 입국했다. 나머지 5천명은 이달말까지 입국한다.

에너지技術개발등 534억원 지원 - 通産部, 연리 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통상산업부는 에너지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과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533억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확정하고 이의 세부지침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고 단기간내 실용보급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협약 발효로 석유·석탄등 화석에너지의 사용제한이 가시화될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에너지의 청정기술개발 등에 279억5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저유가의 지속으로 관심이 다소 부족해 보급이 저조한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및 폐기물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253억5천만원을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조건은 연구자금이 연리 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동일건당 5억원까지 지원되며 운전자금은 연구자금과 대출조건은 같고 대출비율이 소요자금의 80%이내이다.

시설자금은 연리 5%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소수력 발전시설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소요자금의 80% 이내(대기업은 50%이내)에서 동일 사업자당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절차는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되며 270만원 이하의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의 경우에는 융자추천업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있다.

'95 장기전력 수급 계획 - 총 122기 5,700만kW의 발전설비 건설 -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93년 11월에 수립된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94년 11월에 수립된 중간기전력수급안정대책을 수정·보완하고, 계획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여 수립한 '95장기 전력수급계획을 최근 확정·공고하였다.

'95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정부, 학계, 연구소, 소비자단체 등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전력수급계획 7개 실무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수요예측, 수요관리, 공급신뢰도, 환경정책, 원자력정책, 민자발전, 대체에너지, 신기술개발, 적정전원구성, 전력계통구성 등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실무검토 후,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및 장기수급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의 주요특성

우선 계획기간을 기존의 2006년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둘째, 수요예측 및 수요관리효과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수요예측의 정확도 개선, 수요관리 목표량의 현실화 및 상·하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계획의 견고성과 유연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셋째, 발전설비계획에 있어서는 기존설비수명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설비에비율은 18~20%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며, 점차 강화되는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환경친화적 전원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발전기술의 개발촉진과 적극활용을 위해 차세대원전, 석탄신발전기술(CCT) 및 대체전원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넷째, 전력사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자발전물량을 대폭 확대하였다.

다섯째, 송변전설비 부문도 장기전력수급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원활한 전력수송 체계확립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 민자발전 등 7대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장기계획의 발전방향 모색과 개선을 위하여 통합전력수급계획 체제확립 등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 수요예측 및 수요관리

수요예측부문에서는 전력소비특성을 반영한 미시방법과 부분별 분석을 병용하여 예측한 전력수요를 총량지표에 의한 예측치로 검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경제성장을 및 주택보급률은 93년 계획시보다 상향조정하고, 산업구조 및 제조업 비중 등 기타 예측전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예측한 결과, 판매전력량은 95년의 1,630억kWh에서 연평균 5.9%씩 증가하여 2010년에 3,656억kWh로, 수요관리전 최대수요는 연평균 6.3%씩 증가하여 2010년에 7,085만kW로 전망되었다.

최대수요 억제 및 전력수요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요금구조 및 제도개선, 빙축열기기 및 가스냉방기기 보급확대, 기기효율 향상 유도 등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하되, 수요관리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2010년의 수요관리량을 수요관리전 최대수요의 7.4% 수준인 521만kW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수요관리후 최대수요는 연평균 5.8%씩 증가하여 2010년에 6,564만kW로 전망되는데, 이는 95년 최대수요 2,988만kW의 2.2배 수준이다.

〈표 1. 장기전력수요〉

(단위:만kW, %)

구 분	판매전력량	최 대 수 요		
		수요관리전	수요관리	수요관리후
95	1,630	—	—	2,988(실적)
2000	2,393	4,505(100)	149(3.3)	4,356(96.7)
2006	3,180	6,101(100)	329(5.4)	5,772(94.6)
2010	3,656	7,085(100)	521(7.4)	6,564(92.6)
평균증가율(%) [95-10기간중]	5.9	6.3	—	5.8

※주 : ()내는 수요관리전 최대수요 대비 비율임

〈표 2. 발전설비계획(1995~2010기간중)〉

(단위:만kW, 기)

구 분		건설계획	폐지계획
원자력		1,930(19)	59 (1)
기 력	석 탄	1,510(27)	—
	국내탄	40 (2)	62 (7)
	석 유	115 (4)	247(17)
	LNG	—	154 (6)
복 합	LNG	1,744(40)	—
	경 유	11 (1)	71 (2)
양 수		330(12)	—
수력/기타		20(17)	26 (3)
합 계		5,700(122)	619(36)

※주 : ()내는 기수, 수력/기타는 개소별로 1기로 산정

〈표 3. 장기전력수급계획〉

연 도	판매전력량 (억kWh)	최대전력 (만kW)	설비용량 (만kW)	설비에비율 (%)
95	1,630	2,988	3,179(3,218)	6.4 [7.0]
97	1,956	3,548	3,995(4,145)	12.6 [5.1]
2000	2,393	4,356	5,196(5,276)	19.3[13.8]
2005	3,059	5,567	6,618(6,793)	18.9[12.8]
2010	3,656	6,564	7,820(7,955)	19.1[12.1]

※주 : ()는 연말기준, []내는 공급에비율임

■ 전원개발 정책방향

석탄신발전방식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활용하기 위해 2005년에 30만kW의 석탄신발전방식(CCT) 건설계획을, 2003년에 5천kW 규모의 대체전원(풍력, 태양광 등) 건설계획을 반영하였다. 또한, 70년대 탈유전원개발정책 추진후 신규건설에서 제외되었던 대용량 석유화력은 석유가격의 안정과 기존 석유화력이 대부분 폐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2002년에 50만kW급 2기를 준공토록 계획하였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경제성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전원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2000년대 중반 동북아시아 지역의 PNG공급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LNG복합의 설비구성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석탄화력 구성비는 하향조정하였다.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발전소별 여건에 따라 탈황설비, 고효율 전기집진설비 등 첨단 환경설비를 설치하거나 저황연로를 사용토록 계획하였다.

원자력의 신규건설규모는 기술개발 및 원전입지확보 등 제반 현실적제약을 고려할 때 총 8기 920만kW(차세대원자력 130만kW급 4기, 원자력 100만kW급 4기, 원자력 100만kW급 4기)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과적으로, 2010년 원전구성비는 33.1%에 머물러 당초 목표로 한 35% 수준까지 높이지 못하였다. 원전설비수명은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되 관련기술 및 인허가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재검토하기로하였다.

설비에비율은 기본적으로 17%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대북한 전력 협력에 대비하여 1~2% 추가한 18.13% 수준을 목표로 하였다.

다만, 97년까지는 공급능력 우가확보가 어려우므로 수요관리 강화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전원구성은 경제성과 에너지 다원화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입지확보, 환경규제, 재원조달 등 현실적 제약과 수요예측, 대북한 전력협력, 연료수급 등 불확실성 대처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과 LNG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석유와 수력 구성비는 감소하며, 석탄 구성비는 점진적으로 하향추세를 유지하여, 2010년에는 원자력 33.1%, 석탄 27.3%, LNG 7%, 석유 4.4%, 수력·기타 7.5%가 되도록 하였다.

■ 발전설비계획

2010년까지 발전설비 총 건설규모는 122기 5,700만kW이며, 전원별로는 원자력 19기 1,930만kW, 석탄화력 29기 1,550만kW, 석유화력 5기 126만kW, LNG복합 40기, 1,744만kW, 양수 12기 330만kW, 수력·기타 17기 20만kW이다.

발전설비 폐지규모는 당초 1,285만kW에서 설비운영 상태가 양호한 원자력 및 대용량 기력의 수명을 5년 연장한 30년을 적용하여 666만kW의 폐지 시기를 2011년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약 6조 7천억원의 신규투자비를 절감토록하고, 총 36기 619만kW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2010년 말의 발전설비용량은 7,955만kW로 95년말 현재 3,218만kW의 2.5배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민자발전 추진계획

원자력은 설비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탄화력 80만kW급은 사업의 효율성과 신규격상 설비임을 고려하여 한전이 건설토록하여 민자발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석탄 50만kW급, LNG복합 45만kW급 및 양수 25만kW급은 전력사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건설 물량의 약 50% 수준을 민자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민자 발전 물량은 93년 계획시 4기 180만kW에서 15기 635만kW(석탄 50만kW급 2기, 45만kW급 11기 및 양수 25만kW급 2기)로 대폭 확대하였다.

■ 송변전설비계획

목표 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지역간 계통연결 및 전압별 계통구성 계획을 수립한 결과, 변전소 수는 94년말 현재 284개소에서 2010년 737개소로, 송전설비는 18,247C-km에서 35,457C-km로, 변전용량은 70,412MVA에서 216,992MVA로 늘어날 전망이다.

■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과제

끝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요관리, 민자발전, 재원조달, 환경, 원자력추진, 입지확보 및 기술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향후 장기계획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전력수급계획 체제확립, 석탄신기술 추진정책 수립, 대체에너지 실용화 방안, 송전계통 신뢰도 등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97년도 계획수립시 검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연도별 발전소 건설계획〉

연도/별	발전소명	시설용량 (MW)	계획수요 (MW)	실비 예비율 (%)	연도/별	발전소명	시설용량 (MW)	계획수요 (MW)	실비 예비율 (%)	
1994	기존설비	28772 (28750)	26636	7.8 [2.8]	1997/6	화동화력#1	500.0			
1995/3	영광원자력#3	1000.0	31793 (32184)	28878	6.4 [7.0]	6	삼천포화력#5	500.0		
4	무주양수#1.2	600.0			6	월성원자력#2	700.0			
6	경진소수력	0.8			6	서인천3단계(S/T)	300.0			
6	태안화력#1	500.0			6	서인천4단계(S/T)300.0				
6	인산복합중설(G/T)	200.0			6	분당복합중설(S/T)	115.0			
6	울산1복합중설(G/T)	200.0			6	울산2복합(S/T)	300.0			
6	분당보합중설(G/T)	225.0			6	보령복합(S/T)	900.0			
6	한화복합(G/T#1)	300.0			6	한림복합(S/T)	35.0			
6	한림복합(G/T#1)	35.0			6	거문도내연	0.5			
8	폐지-한림GMC	-17.0			6	덕적도내연	0.5			
9	폐지-울산1복합(G/T)	-110.0			6	팔당수력보강	20.0			
12	추자도내연	0.5			7	보령복합중설(G/T)	900.0			
12	태안화력#2	500.0			9	폐지-한화#2	-182.4			
1996/3	안산복합중설(S/T)	100.0	35723 (35702)	32003	9.6 [3.4]	9	태안화력#4	500.0		
3	영광원자력#4	1000.0			11	한화복합(S/T#2)	150.0			
4	홍산도내연	1.5			12	삼천포화력#6	500.0			
6	조도내연	1.0			12	화동화력#2	500.0			
6	울릉도내연	1.5			12	남강수력(다목적)	14.0			
6	서인천3단계(G/T)	600.0			1998/6	울진원자력#3	1000.0	45546 (46574)	33388	18.6 [11.0]
6	서인천4단계(G/T)	600.0			6	월성원자력#3	700.0			
6	울산2복합(G/T)	600.0			6	화동화력#3	500.0			
6	한림복합(G/T#2)	35.0			6	동해화력(국내연)	200.0			
6	한화복합(G/T#2)	300.0			6	보령복합(S/T)	450.0			
6	한화복합(G/T#3)	300.0			6	보령복합중설(S/T)	150.0			
9	폐지-제주화력 외	-172.4			6	울산1복합성능부구	50.0			
10	반월소수력	1.0			7	부산복합(G/T)	900.0			
11	한화복합(S/T#1)	150.0			10	당진화력#1	500.0			
1997/1	폐지-부산#12	-120.0	33945 (41446)	35482	12.6 [5.1]	12	화동화력#4	500.0		
1	장남소수력	0.8			12	밀양수력(다목적)	1.3			
2	울릉도내연	1.5			12	용담수력(다목적)	26.3			
3	태안화력#3	500.0			1999/1	폐지-군산화력 외	-340.0	49179 (50880)	41032	19.9 [12.6]
6	폐지-북제주(G/T)	-110.0			6	울진원자력#4	1000.0			
					6	월성원자력#4	700.0			

연도/월	발전소명	시설용량 (MW)	최대수요 (MW)	설비 예비율 (%)	연도/월	발전소명	시설용량 (MW)	최대수요 (MW)	설비 예비율 (%)												
1999/6	당진화력#2	500.0	49179 (50880)	19.9 [12.6]	2004/1	해저-서울#5	-387.5	63833 (64283)	53430	19.5 [13.3]											
	6	북제주화력#2				75.0	6				울진원자력#6	1000.0									
	6	팔당수력보강				20.0	6				석탄화력(民資)	500.0									
	6	국내탄화력				200.0	12				LNG복합#3(大邱民資)	450.0									
	7	부산복합(S/T)				450.0	2005/1				해저-인천#3,4	-650.0	66183 (67933)	55666	18.9 [12.8]						
	9	화동화력#5				500.0					3	LNG복합#4				450.0					
	9	산정양수#1				350.0					3	석탄적상#3				800.0					
	12	산정양수#2				350.0					3	CCT(FBC, IGCC)				300.0					
	12	황성수력(다목적)				1.4					6	원자력#1				1000.0					
	2000/3	화동화력#3				500.0					51955 (52755)	19.3 [13.8]				10	양수#1,2	500.0	450.0	800.0	12
6		당진화력#4	500.0	12	석탄적상#4	800.0															
6		북제주화력#3	75.0	2006/1	해저-울산#2,3 외	-870.0		68963 (69963)	57717	19.5 [13.0]											
12		영흥도화력#1	800.0		3	LNG복합#6										450.0					
2001/1	해저-영월#1,2	-100.0	55005 (55906)		19.3 [12.8]	3					LNG복합#7(民資)	900.0				1000.0	2007/1	해저-영남#1,2	-400.0	71213 (71213)	58797
	3	LNG복합(民資)				400.0	3				LNG복합#8	450.0									
	3	LNG복합#1				450.0	3				LNG복합#8,10(民資)	900.0									
	6	영광원자력#5				1000.0	6				차세대원자력#1	1300.0									
	6	양양양수#1,2				500.0	2009/1				해저-고리#1	-587.0	76301 (77651)	63776	19.6 [13.0]						
	12	영흥도화력#2				800.0					3	LNG복합#11						450.0			
	12	영월수력(다목적)				100.0					3	차세대원자력#4						1300.0			
	12	적성수력(다목적)				0.1					3	원자력#3						1000.0			
2002/1	해저-북제주내연	-40.0	57766 (58666)	18.7 [12.9]	9	LNG복합#12		450.0	450.0	2010/1	해저-영동#2 외	-1350.0				78201 (795510)	65642	19.1 [12.1]			
	3	석유화력#1			500.0	12		LNG복합#13			450.0										
	6	영곡원자력#6			1000.0	12		LNG복합#14(民資)			450.0										
	6	LNG복합(民資)			400.0	2010/1		3			LNG복합#15,16	900.0							1000.0	450.0	450.0
	9	석유화력#2			500.0			3			원자력#4	1000.0									
2003/1	해저-군산복합 외	-600.0	60916 (62721)	19.2 [13.3]	9			LNG복합#17(民資)	450.0	450.0	2010/1	9				LNG복합#17(民資)	450.0				
	3	석탄화력#1			500.0		12	LNG복합#18	450.0												
	3	석탄적상#1			800.0		12	LNG복합#19(民資)	450.0												
	3	LNG복합#2(大邱民資)			450.0		2004/1	6	원자력#2,3 외			-870.0	68963 (69963)	57717	19.5 [13.0]						
	6	울진원자력#5			1000.0			3	LNG복합#6			450.0									
	6	석탄화력(民資)			500.0			3	LNG복합#7(民資)			900.0									
	9	대체전원(풍력 등)			5.0			6	원자력#2			1000.0									
	9	석탄화력#2			500.0			2007/1	해저-영남#1,2			-400.0				71213 (71213)	58797	19.1 [12.3]			
	10	양양양수#3,4			500.0	3			LNG복합#8			450.0									
	12	석탄적상#2			800.0	3			LNG복합#8,10(民資)			900.0									
2008/1	해저-군산복합 외	-600.0	60916 (62721)	19.2 [13.3]	6	차세대원자력#1			1300.0	2009/1	해저-고리#1	-587.0							76301 (77651)	63776	19.6 [13.0]
	3	석탄화력#1			500.0	3			LNG복합#11		450.0										
	3	석탄적상#1			800.0	3			차세대원자력#4		1300.0										
	3	LNG복합#2(大邱民資)			450.0	3	원자력#3		1000.0												
	6	울진원자력#5			1000.0	9	LNG복합#12		450.0												
	6	석탄화력(民資)			500.0	12	LNG복합#13		450.0												
	9	대체전원(풍력 등)			5.0	12	LNG복합#14(民資)		450.0		2010/1	해저-영동#2 외	-1350.0	78201 (795510)	65642						
	9	석탄화력#2			500.0	3	LNG복합#15,16	900.0													
	10	양양양수#3,4			500.0	3	원자력#4	1000.0													
	12	석탄적상#2			800.0	9	LNG복합#17(民資)	450.0													

※주 : () 내는 연말기준, [] 내는 공급예비율임

CALS표준 150개 개발 · 보급

— 工振廳, 98년까지...標準化추진계획 발표 —

공업진흥청은 오는 98년까지 데이터 · 전자출판 등 핵심 CALS(광속 전자상거래)표준 150개 규격을 제정보급하고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등 CALS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CALS표준위원회를 확대 · 개편하는 동시에 한국산업표준원을 CALS 표준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등 국내 CALS표준체계 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공진청은 CALS체제의 조기도입 ·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CALS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 ·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98년까지 150개 표준규격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CALS의 가장 기본규격인 설계 · 제조데이터, 전자문서표준, 래스터 그래픽표준, 전자출판언어 등 11분야 40개 규격을 개발하고 CALS를 간접지원할 정보처리규격 50여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공진청과 국방대학원이 공동으로 CALS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작성 · 보급해 CALS의 개념과 추진방법에 대한 업계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 CALS표준위원회의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산하에 작업반을 설치, 국내산업수요 및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면서 연차별 우선순위를 정해 표준화작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통산부 등 여타 부처의 CALS추진계획과 기존 정보관련 규격이 상호연동되도록 올해 1월 발족한 CALS/EC협회 산하에 신설예정인 CALS연구조합에 CALS표준위원을 참여시켜 기술수요와 표준화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산업표준원 내에 CALS표준지원센터를 뒤 CALS와 관련된 ISO · IEC 등 국제규격과 ANSI규격 · NATO규격 등 선진국규격을 신속히 수집 · 보급하고 새롭게 제정되는 CALS규격 중 신기술규격에 대해서는 '잠정규격제도'를 도입, 2~3년간 시험규격으로 활용 후 기술이 안정되면 정식규정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관련 국제표준활동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CALS와 관련된 ISO·IEC 국제표준화회의에 158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동시에 5~11월중 지리정보, 식별카드와 관련장치, 개방형 EDI 등 3분야의 국제표준화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기업의 인식전환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민·관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술혁신형 中企 50개 육성 - 工振廳, 기술·자금등 종합지원 방침 -

공업진흥청은 올해부터 매년 성장잠재력을 지닌 성장유망중소기업 50개를 선정, 종합적인 지도·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지방공업기술원과 업종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지도기관의 전문가 등 60명의 진단팀을 투입, 기업의 경영·기술·제품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진단해 5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제품상의 취약점 진단,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지도, 기술인력 교육, 기술정보 제공, 자금지원 추천, 우수중소기업 추천, 우선구매 추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지도비용 2억5천만원을 정부예산에서 전액 지원하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통산부·구매기관·금융기관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21세기 중소기업의 모델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종 지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취약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체제를 도입해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지도실적이 부진한 지도요원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에서 제외하고 지도성과에 대한 업체별 제3자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지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진청은 이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기업의 매출액 및 생산성이 각각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에도 下都給지급보증제 — 調達廳, 제작기간 1년 10억원이상 우선시행 —

정부 조달물품 납품업체가 부품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제조업종에도 도입된다.

조달청은 정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제조물품업체로 하여금 부품협력업체와의 계약상황과 대금지급각서 등을 첨부, 제출토록 하고 이행여부를 다음 계약에 반영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를 빠르면 5일부터 도입,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조달품 공급계약을 맺는 주계약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후 7일안에 부품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해야 한다.

조달청은 우선 10억원이상의 정부물품 가운데 제작납품기간이 1년을 넘는 전동차·미니컴퓨터·에스컬레이터·선박·쓰레기소각장비·정수처리설비 등의 기계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업체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선금액도 크게 늘려 물품대금이 10억~100억원 일 때 30%, 100억원이상일 때 20%씩 지급되던 선금규모를 10억~100억은 50%로, 100억원이상일 때는 3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부품협력업체에 지급될 선금은 따로 추가 지급키로 해 일부품목의 경우 선금액이 전체 물품대금의 70%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미국전기공업협회(NEMA) 사무국 이전

○ 미국의 전기기기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전기공업협회(NEMA)는 지난해 12월 사무국을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00 North 17th Street, Suite 1847, Rosslyn, Virginia

22209 Washington D.C, U.S.A.

— 전화 : 703-841-3200